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총력... 통준위 가동

광주·전남·행안부 협약·정책조정·현안 조율 핵심 창구

전문가 17명 참여... 순회회의 등 현장기반 실행안 수립

광주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행 설계를 총괄할 준비위원회를 공식 가동했다.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책 조정과 현안 심의를 맡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서, 통합 행정 체계 전환을 위한 실질 작업이 본격화됐다.

광주와 전남도는 지난 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준비위원 등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행정·지역 대학·경제산업·농수산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과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에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광주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이 참

여한다. 공동위원장은 광주 측 정영팔 위원과 전남 측 박민서 위원이 맡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추천 오세범 위원이 맡아 위원회 운영을 이끈다.

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활동하며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시·도 정책협의체에서는 이의된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 직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 방안과 운영세칙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남과 광주를 오가며 정례 회의를 이어가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한 제도 정비만 넘어 산업·행정·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모델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도,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업무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김태균 의장, 서용규 부의장, 김민재 차관이 참석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세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제 54일 뒤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역사 속으로 남고, 부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시대

가 열린다"며 "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특별시 성패를 좌우할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시도민과 정

부의 지원으로 광역 통합이 현실화됐다"며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5·18 구묘지, 시민친화형 민주공원으로 조성

총사업비 200억 투입 '구묘지 민주공원'...2029년 준공 목표

역사관·열사 유영봉안소 건립...5·18묘지 연계 추모마당 건립

광주 5·18 구묘지가 추모와 시민휴식 기능을 갖춘 시민친화형 민주공원으로 조성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5·18 민주회 공법단체,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관련 단체, 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사업 추진협의체 위원들과 차담회를 열어 '빛의 혁명 발원지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다.

5·18 구묘지 민주공원 사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펼친 끝에 5·18 사적지 지정 이후 28년 만에 총사업비 2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5·18 구묘지에 대규모 야외 추모를 위한 행사마당과 박석마당을 조성하고, 내부 추모행사를 위한 다목적 행사공간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시공간인 역사관과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도 신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로 이설, 국립5·18민주묘지 연계 보행자 추모객을 위한 진입 마당 조성, 도

시공사 사무소, 매점, 화장실 등 낙후된 시설 철거 및 신축, 방문자센터, 카페테리아 등 추모객·방문자 편의시설 설치, 노후 공원시설 정비 등이 담겼다.

광주시는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3월 관련 단체 대표들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했으며, 15차례의 추진협의체 운영과 50여회의 단체별·개별 설명 및 논의 등을 거쳐 3년여만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광주시는 합의를 바탕으로 건축기본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역사관 콘텐츠 개발과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5·18 구묘지 민주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5·18 구묘지를 광주정신이 살아 숨 쉬는 빛의 혁명 발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오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본격 추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성사업을 통해 5·18 구묘지가 세계인들이 찾는 K-민주주의 순례지이자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5·18 구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최초로 안장된 장소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창작 배경지로도 알려져 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현열 열사를 비롯한 민족민주열사들이 안장된 5·18정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전남도, 특별시 인권행정체계 모색

국가인권위·인권단체 등 40여명 집담회

광주와 전남도가 통합특별시 시대에 걸맞은 인권행정 체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인권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권기구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 집담회'가 지난 8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집담회는 광주시 인권유무즈맨이 주관했으며, 통합특별시 인권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집담회에는 광주시 전현직 인권유무즈맨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전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와 도민권침해구제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집담회는 전문가 6인의 발제를 통해 통합 이후 인권보장체계 구축 방향과 인권기구 모델을 분석하고, 통합특별시 인권기구의 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절차 대폭 단축

타임아웃제·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규정

정부는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와 관련한 규제를 대거 해소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AIDC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올해 과학부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돼 있다.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하고 실행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의 근거를 뒀다.

특별법안은 이와 함께 조속한 AIDC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광구인 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해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농어촌 정주개선' 법안 통과

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건의 제정안과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에 반영됐다.

이 가운데 서 의원 안은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일한 법안이다.

해운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행정선의 이용 대상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전남·광주 1357억원 지역성장펀드 본격 추진

혁신기업·주력산업 투자 기반 구축...연내 운운사 선정 등 착수

수도권 편중 완화...12개 자펀드로 성장 단계별 투자 체계 마련

광주·전남지역 혁신기업과 주력 산업에 13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통합형 지역성장펀드'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지역 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이 마련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생태계 확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지역성장펀드' 공모에서 전남·광주 통합형 펀드가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37년까지 12년간 1357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경북, 전남·광주, 대전·울산 등 4곳이 선정됐다. 전남·광주 통합형 펀드는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지역 혁신기업과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조성 규모는 모두 1357억원이다. 모태펀드 750억원, 전남·광주 출자금 160억원, 민간·기초자치단체 등 기타 출자금 447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40억원, 광주가 417억원 규모다. 전남 몫은 모태펀드 500억원, 전남도와 시

군 출자금 100억원, 민간·기초 등 기타 출자금 340억원이며, 광주는 모태펀드 250억원, 광주시 출자금 60억원, 기타 출자금 107억원으로 짜였다.

펀드는 12개 자펀드로 나눠 운용된다. 로컬 분야 1개, 소형 4개, 중형 4개, 대형 3개 자펀드로 구성되며, 자펀드별 투자 대상과 운용 기간은 분야별 특성에 맞춰 달라질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중기부의 지역성장펀드 공모가 시작된 뒤 모펀드 출자자 모집과 신청 준비를 병행했다. 출자자에게는 포스코를 비롯해 여수·순천·광양·나주·해남 등 시군, 농협·광주·기업은행 등 금융권, 순천대·목포대 등 지역 대학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광주와 함께 지난 2월 24일 통합형 펀드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기부는 3월 30일 전남·광주 통합형 펀드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며 펀드 결성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오는 8월부터 10월 사이 모펀드 출자를 확정하고 결성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실제 투자 대상 기업 발굴에 나선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특별법 특례'서 계속

해상풍력은 전력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농지 규제는 농지법과 별도 특별법 정비가 요구된다. 공공항 이전은 별도 특별법 개정이 전제되며, 국립의대 설립 역시 정부의 정권 정책과 직결된다. 통합 특별시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후속 제도 정비도 지연될 경우 실질적 권한 확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미반영 특례를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과 개별 법률 개정을 병행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합 초기에는 조직과 재정 통합에 집중하되, 이후 산업·에너지·의료 등 핵심 분야 특례를 확보해 통합 효과를 구체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과제들도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국회, 광주시와 협의해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